



주간통일정세 2008-48(2008.11.24~11.3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4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모범일꾼에 감사(11/30,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정보센터 다매체(멀티미디어) 창작실 기술자를 비롯해 각종 산업시설과 건설현장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평양방송이 30일 보도

● 김정일, 공군부대 시찰(11/30,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공군 제1016부대를 시찰했다고 북한 언론 매체들이 30일 일제히 보도,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김 위원장이 이번 공군부대 방문에서 공군 사령관 리병철 상장(남한의 중장)의 마중을 받았으며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과 함께 비행훈련을 지켜봤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적들의 침략 책동에 대처해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경계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보도하고 이어 군인회관, 교양실, 침실, 식당, 취사장 등 부대 시설을 둘러본 뒤 부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는 11월 24일 평안북도 락원기계연합기업소와 신의주화학공품공장 비누직장 시찰 보도 후 엿새 만이며, 군부대 시찰은 11월 4일 제2200군부대 및 제534군부대 직속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 훈련장 시찰 후 26일 만임. 북한 매체는 11월 15일과 16일엔 김 위원장이 제32차 군무자예술축전 공연을 관람했다고 잇달아 전하는 등 이달 들어 모두 7차례 그의 공개 활동을 소개

●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상 전달(11/27,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흥화학공업대학 연구사이자 공훈과학자인 차달성 교수(박사)와 의학과학원 함흥임상의학연구소 실장인 박재욱 교수(박사)에게 각각 70회 생일상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

● 김정일 10월 하순 또 발작(11/26, 마이니치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월 하순에도 뇌졸중으로 발작을 일으켜 긴급 수술을 검토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됐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



-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 내용은 김 위원장이 10월 하순에 두번째로 뇌졸중을 일으켰다는 정보를 한국에 있는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고 보도한 일본 민방 TBS의 내용과 거의 일치, 당시 우리 정부는 “확인해 줄만한 객관적인 팩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8월 중순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면서 긴급 입원했으며 정밀검사 결과 심장내 혈전이 떨어져나가 뇌혈관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이에 중국과 프랑스 양국 뇌신경외과 전문의가 평양에 갔으며 며칠 뒤 프랑스 전문의가 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짐.
 - 김 의원장은 왼쪽 반신에 마비가 남고 언어도 불명료한 상황이었지만 수술 후 약 두달간의 경과를 비교적 순조로웠으나 10월 하순 재차 발작이 왔으며 증세가 심각해서 의료팀이 두차례에 걸쳐 긴급 수술을 검토했었음. 그러나 재수술이 실시됐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며 베이징(北京) 외교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현재는 소강상태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김 위원장은 이전부터 당뇨병, 신장병을 앓아왔으며 체내에 축적된 독소가 다른 장기 기능을 저하시켜 2007년부터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곤 했던 것으로 전해짐. 한 외교소식통은 마이니치에 “김 위원장은 결재 사항인 핵문제 관련 담화가 11월 12일에 나온 만큼 일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건강상태는 분명히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
 - 이와 함께 마이니치는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로 인해 그의 매제인 장성택(張成澤)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이 주요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고 보도
- **김정일 공장 시찰사진 공개, 근로자는 안보여(11/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건강이상설 속에 장기은둔하다 공개 활동을 재개한 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신의주 산업시설을 현지지도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고 관련 사진 2장도 공개
 - 공교롭게도 북핵 6자회담이 12월 8일 개최된다는 사실이 발표되고, 특히 북한의 군사분계선 통행 차단·제한 조치가 남측에 통보된 직후에 김 위원장의 건강 호전을 과시하는 원거리 현지지도 보도가 나오므로써 김 위원장이 이들 주요 정책을 직접 챙기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임.
 - 통신이 공개한 사진은 김 위원장이 김평해 노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로 보이는 인물 등 수행원 2명과 함께 락원기계연합기업소 공장 건물 안의 대형 굴착기 옆에 서서 지배인으로 보이는 인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과 하얀 타일이 붙은 신의주화장품공장 건물을 배경으로 수행원 2명과 함께 찍은 것임.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무



표정한 얼굴의 김 위원장은 이달 초순 공개된 북한군 축구경기 관람 때와 같은, 짙은 햇빛의 인민복 위에 부드러운 재질의 갈색 반코트를 걸치고 바닥이 편평한 구두를 신고 있음. 김 위원장은 곳곳이 선 채로 두 손 다 반코트 주머니에 넣고 있음. 이번 사진에는 공장 근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나. 정치 관련

● 범민련, 6·15, 10·4선언 이행 투쟁(11/30,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 북, 해외 본부는 30일 범민련 결성 18돌을 기념한 공동결의문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 범민련은 결의문에서 “6·15 통일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는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대세”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공화국(반북) 대결정책”이라고 비난
- * 범민련은 1990년 8월15일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열린 제1회 범민족대회에서 창립키로 결의된 후 해외(1990.12), 북측(1991.1), 남측(1995.2)에서 차례로 결성됐으나 범민련 남측본부은 1997년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음.

● 北, 南 대결자세 비난(11/29, 통일신보; 11/30, 우리민족끼리)

- 통일신보는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 차단 등 북한의 ‘12·1조치’에 대해 남한이 유감 표명과 함께 기존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대결 자세를 계속 드러내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주장
- 통일신보는 ‘대결기도를 다시금 드러낸 반통일 분자들의 광증’이라는 글에서 청와대와 통일부 관계자들이 북한의 조치에 ‘심각한 유감’이나 ‘남북간 합의사항에 배치’ 등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에 대한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비난 하며 “화해의 시대에 북과 남 사이에 이룩된 모든 합의들을 다 안고 있는 가장 큰 합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인데 “이런 공동선언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휴지조각처럼 차던지는 남한 정부가 ‘합의사항 위반’을 떠드는 것이야말로 가소로운 일”이라고 주장

● 北, 대북 삐라살포 정부 대책회의 비난(1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남한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 행위에 대해 “미지근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삐라 살포 행위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
- 노동신문은 ‘삐라살포 사태의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가 11월 19일 통일부 차관 주재로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한 범정부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전단 살포를 “몇몇 단체들의 행위로 공인시키고 저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북남관계 파국의 책임을 모면하며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서퍽 짜리 연극”이라고 비난

- 이어 대북 전단 살포는 “서로 적대시하지 않으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문제를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기로 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면서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 위기”에 처한 것은 “우리 공화국을 자극하고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반민족적인 뼈라 살포 행위를 발광적으로 벌인 것과는 중요하게 관련된다”고 주장

● **민주조선, 남북관계 개선위해 대북정책 수정 촉구(11/27,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7일 ‘동족대결의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다시 촉구
- 신문은 “앞으로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가 더 악화되는가 하는 것은 대북정책을 바꾸는가 바꾸지 않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며 “북남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 바꾸어야 할 것은 동족대결 자세”라고 주장
- 민주조선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배치되는 ‘비핵·개방·3000’ 따위를 대북정책으로 내들지 않고 외세와 야합해 동족을 해치려고 날뛰지 않았더라면 북남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

● **南 인권문제 제기는 도발(11/25,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파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도발”이라고 비난
-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인권문제를 코에 걸고 외세와의 국제공조로 북남관계를 전면차단으로 몰아넣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도발 책동으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연일 “대북정책 근본전환” 요구(1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북남관계를 어디로 끌고갈 심산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북남관계는 전면차단이라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은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걷어치우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는 발언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대북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언급을 거론,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을 계속 유지하며 우리와 끝까지



엇서나가겠다(반발해 나가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라고 규정, 또 신문은 “북남관계가 더 이상 방관시할 수 없는 최악의 위험상태에 처했는데 이제 무엇을 더 기다리겠다고 하느냐”며 “그것이 북남관계가 전면적으로 차단되고 전쟁을 도발할 기회를 고대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과연 말할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함.

다. 경제 관련

- **北, 佛투자 北시멘트공장 “높은 생산실적”(11/30, 조선중앙방송)**
 - 프랑스의 시멘트업체 라파즈사가 이집트 오라스콤그룹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투자한 북한의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가 2008년 설비 개선과 함께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오라스콤은 2007년 7월 상원세멘트의 지분 50%를 취득하면서 1억 1천5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2008년 공장 지분과 탄광 채굴권을 라파즈사에 넘김. 라파즈사는 2008년 9월 “북한에서 시멘트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상원세멘트 공장의 잠재력이 크다”며 공장 설비를 최신 것으로 바꾸고 기계와 시설 투자를 확대해 2010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300만t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광산·전력 부문 투자도 병행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北, 유망 지하자원 매장 다수 발견 보도(11/30,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30일 북한 각 도의 탐사관리국 산하 지질탐사대가 최근 탐사를 활발히 벌여 개발이 유망한 지하자원 매장지들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보도
 - 평안남도의 탐사관리국의 탐사대들은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 매장지를 많이 확보”했고, 황해남도과 강원도의 탐사대들은 “철광석 탐사에서 실적”을 올렸으며, 양강도의 탐사대들은 “유색금속 광물 탐사에서 유망한 광물 후보지를 마련했다”고 방송은 보도, 그러나 이들 탐사대가 찾아냈다는 지하자원의 종류나 장소, 매장량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北해역서 中어선 불법조업 성행(11/28, 신경보)**
 - 중국 어선들이 서해상의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 불법적인 조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중국 언론, 신경보(新京報)가 28일 보도
 - 신문은 동강시 인근 해역은 어족자원이 빈약하지만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북한 해역은 자원이 풍부해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어민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 중국 어선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려면 허가증이 필요한데 이를 개인들끼리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브로커를 통해 중국 해관과 해양경찰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조직적으로 이뤄



지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이같은 불법 행위는 대행회사들까지 등장해 성업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등강시 어정처(漁政處)의 한 관리도 “이런 현상은 등강에서는 이미 오래된 일”이라고 인정했다고 보도

● 北, 2009년부터 중국산 중고차 밀매 금지(11/2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2009년부터 북한의 자동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중고 자동차 밀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북한에선 2007년 1월 일본이 일본산 자동차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 이후 틈새를 노린 중국산 자동차의 밀무역이 성행했다고 RFA는 설명, 원래 북한에서는 평화자동차와 계약을 맺은 화천자동차 이외에는 중국 자동차를 수입할 수 없게 돼 있음.
- RFA는 또 “북한은 내년부터 자동차 수입 관세도 대폭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동안 중국 상인들이 북한의 낮은 관세를 이용해 판매했던 미국 GM의 뷰익과 독일의 폴크스바겐 등 일부 자동차의 판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그러나 “북한 당국이 관세를 올리더라도 기증이나 물물교환 형태의 편법 매매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北, 개성공단 축소하고 신의주특구 개방(11/26,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을 축소하고 신의주특구를 대외교역 기지로 본격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26일 북한이 개성공단 축소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 25일 새벽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의주 산업시설을 시찰했다는 보도가 나온 점에 주목하면서 이는 신의주특구 개방을 시사하는 하나의 수순으로 관측된다고 보도
- ‘건강이상설’이 나돌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관계에 찬바람이 부는 시기에 중국과의 국경지대인 신의주 산업시설을 시찰한 것은 신의주특구 개발과 개방에 대한 열의와 의지를 읽게 해준다고 소식통들은 보도, 신의주특구 개발은 중국측과도 협의를 한 것이며 중국측도 신의주특구 개발·개방과 연계해 인접도시인 단둥(丹東)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언급
- 베이징 당국은 신의주-단둥 연계 개발을 위해 군부와 상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이 조만간 북한에 7억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할 계획인데 이 차관이 신의주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추측

● 北, 2009년부터 시장기능 대폭 축소 시도(11/25, 오늘의 북한소식)

-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25일 북한 소식지를 통해 북한 당국이 11월 6일 북한 전역에 ‘상업성 지시문 61호’와 ‘도 지시문 23호’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전국 (종합)시장을 모두 농민시장으로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평양의 한 간부’는 이 지시에 대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1일장 (매달 1일, 11일, 21일 등 열흘만에 열리는 비상설 시장)으로 바뀌고, 앞으로 식량은 양정사업소에서, 공업품은 국영상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

● 류경호텔 외벽 유리공사 착수(11/24, 연합뉴스)

- 16년간 공사가 중단돼 평양의 흉물로 방치돼왔던 북한 평양의 류경호텔이 최근 외벽유리 부착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됨. 24일 연합뉴스가 최근 평양을 방문한 방북자들로부터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 평양 류경호텔 건물 6개면 중 2개면 하단부에서 유리를 붙이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사진판독 결과 현재 유리공사는 지면으로부터 30층 높이에서 시작돼 아래로 20여개층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됨. 류경호텔 유리공사가 시작된 시점은 대략 11월 초 이후인 것으로 추정
- 이와 관련, 다롄(大連)의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선박이 다롄항에서 류경호텔 유리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싣고 들어갔다”고 전하고 “북한은 이집트 오라스콤사로부터 우선 1억달러 투자를 받아 건물 아래쪽 공사를 먼저 끝마치고 비즈니스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이집트 오라스콤사는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추진하는 대가로 류경호텔에 투자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북한을 다녀온 방북자 P씨는 “일부 북한 당국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이미 시범서비스는 시작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전했다.

라. 사회·문화 관련

● 北대표 작곡가, 성동춘 사망(1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국립민족예술단 소속 작곡가인 성동춘(71)이 사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7일 고인의 빈소에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1937년생인 그는 김정일 위원장의 애창곡인 ‘동지애의 노래’와 대표적인 통일 가요인 ‘조선은 하나다’ 등을 작곡하고 1995년 8월부터 2001년까지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장을 지낸 북한의 대표적인 작곡가 가운데 한 명이며, ‘김일성상’을 수상하고 ‘인민예술가’ 칭호도 받았음.

● 北인구연구소, 고령자 현황 연구발표회(1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구연구소는 26일 평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인구학적 특징과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참석자들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 말까지 평양시와 평안남도, 함경남도의 60개 동과 리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노인 인구상태 연구조사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통신은 “2007년 노인 인구상태에 대한 연구조사 자료는 노인들을 위해 취해질 사회경제적 및 보건의학적 대책의 수립과 노인들을 위한 여러가지 새로운 활동계획 작성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게 된다”고 소개

● **北, 메탄가스 가정이용 적극 장려(11/26,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이 극심한 에너지난 속에서 농촌 가구의 부족한 연료와 조명을 개선하는 데 메탄가스를 이용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6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과학기술총연맹이 11월 19~21일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메탄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대한 전국 기술강습’을 열어 농촌 가정에서 메탄가스를 연료와 조명에 이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

● **北, 책읽기 생활화, 전공공부 매진(1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인재가 많아야 나라가 흥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인재양성을 위해 책을 많이 읽고 전공분야에 대한 학습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우리 당은 강성대국 건설에서 인재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며 “누구나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은 사회에 혁명적인 독서기풍을 세워 누구나 책을 생활의 길동무로 삼고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실지 사업에 활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며 “모든 부문에서 자기 전공분야에 정통하기 위한 강행군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촉구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라이스, 6자회담 초점은 핵검증서 승인(11/26, 연합뉴스)**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내달 8일로 예정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의 초점은 북핵검증을 위한 북미간 합의를 승인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26일 밝힘.
- 라이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참가하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베이징에서 열 예정”이라면서 “이번



6자회담의 초점은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 참가국을 대신해 서명한 검증의정서를 승인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

- 그는 “우리는 (핵검증 문제를 다룬) 문서는 물론 (북미간 이뤄진) 몇가지 언질과 양해사항을 6자회담에서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핵검증 의정서 추진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며 다른 목적이 없다”고 강조
- 라이스 장관은 “불능화가 재개됐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결론에 이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검증의정서는 현 단계에서 핵심”이라고 강조

● 中, 다른 참가국들과 6자회담 일정 협의 중(11/25,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25일 “중국은 현재 다른 참가국들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12월8일 6자회담을 개최하자고 다른 5개국에 제안했으며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
- 이에 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3일 페루에서 열린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이 12월 8일 베이징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었음.
-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 주말 중국 외교부의 질의를 받고 12월 8일 6자회담 개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러시아는 미정 상태인 것으로 알려짐.

● 北, 경제보상이 6자회담 진전에 중요(11/24, 조선중앙통신)

- 북핵 6자회담이 12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당국의 시료채취 거부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5자의 경제보상은 6자회담의 앞으로의 진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사태의 본질을 바로 보아야 한다’ 제목의 글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 언론들이 “6자 단장회담(수석대표회담) 개최가 늦어지고 5자의 경제보상 속도가 처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무슨 시료채취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듯”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들씌워 6자회담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극히 불순한 행위”라고 주장
- 특히 통신은 10월 초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때 합의된 문건에 “시료채취와 관련한 그 어떤 문구도” 들어 있지 않는데 6자회담에서 시료채취 등을 포함시킨 검증문건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특수상황에 대해 견해의 일치를 보고” 채택한 평양합의에 대한 “전면거부로 된다”고 주장
- 통신은 시료채취 문제의 제기에 대해 “서면합의 밖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곧 가택수색을 시도하는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난하며 “지금 일부 세력들과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 언론들이 시료채취 문제를 들고



나오는 데는 6자회담 자체를 지연시켜 저들의 경제보상 의무를 태공(태만)하고 의무이행이 처진 것을 합리화해 보려는 데 그 속심이 있다”고 주장

나. 북·중 관계

● 2008년 북·중 교역규모 크게 증가(11/27, 연합뉴스)

- 2008년 북한과 중국 간 교역 규모가 10월에 이미 작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27일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북·중 교역액은 총 21억2천400만달러로 지난해 총 교역액 19억7천600만달러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됨. 이런 추세라면 올해 북·중 교역규모는 25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6억7천100만달러, 수입은 14억5천300만달러를 기록해 2007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38.8%와 2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양국 교역규모가 2007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교역 비중이 큰 광석과 광물성 연료(원유와 석탄)의 교역이 대폭 증가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됨.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북한산 광석수입은 1억8천740만달러로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59.2% 증가했으며,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광물성연료도 4억6천700만달러로 5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 * 북·중 교역규모는 2005년 16억달러, 2006년 17억달러, 2007년 19억7천600만달러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북·중 교역규모가 남북한 교역 규모를 2억달러 가량 초과했음.

● 北-中, 체육교류의정서 체결(1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체육지도위원회와 중국 국가체육총국이 25일 평양에서 2009년 체육교류의정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 의정서에는 북한의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과 중국의 류펑(劉鵬) 국가체육총국장이 양측을 대표해 서명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 북한과 중국은 2007년 11월 28일 베이징(北京)에서 2008년 체육교류의정서를 조인하는 등 해마다 평양과 베이징에서 번갈아 이 의정서를 체결

● 연변에 北청진시대표단 방문(11/24, 연변일보)

- 북한의 청진시인민위원회 대표단이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를 방문, 동포신문인 연변일보는 “(연변)주정부 부주장 서문순기는 23일 연변백산호텔에서 조선 청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리광남을 단장으로 한 청진시방문단을 회견했다”고 보도



- 신문은 시먼순지(西門順基) 부주장은 “리광남 일행의 연변 방문에 환영을 표하면서 두만강지역 국제협작개발의 새로운 형세에서 연변은 청진시로 통한 물류통로와 룡로-해상연합운수통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며 “통로건설은 두 지역 간의 경제협작 및 관광업 발전에 깊은 의의를 갖고 있으며 새로운 발전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다. 북·러 관계

● 무역촉진위 대표단 러시아 방문(11/27, 조선중앙통신)

- 무역성 부상인 리명산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27일 비행기 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라. 북·일 관계

● 日경찰, 조총련 관련 시설 또 압수수색(11/27, 연합)

- 일본 도쿄 경시청公安부는 27일 무자격으로 세리사(세무사) 업무를 한 혐의(세리사법위반)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단체 전직 간부(54)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음. 경시청은 27일 오전 도쿄 우에노(上野)에 있는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였음.
- 경시청에 따르면 이 간부는 재일본조선도쿄신주쿠(新宿)상공회 부회장이었던 2006년 3월 초순 음식업을 경영하는 상공회 회원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리사 자격이 없음에도 2005년 확정신고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음, 경시청은 10월 29일에도 신주쿠 상공회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음.

● 日 대북 제재 “안 통한다” 주장(1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부질없는 반공화국 제재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일본이 납치문제와 관련해 대북 추가 제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제재는 “우리(북한)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으며 무의미하다”고 주장

마. 기타외교 관계

● 北경제대표단,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방문(11/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리광남 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정부경제대표단이 29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이날 보도, 그러나 대표단의 구체적인 방문 목적이나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북한은 1973년 6월 말레이시아, 1975년 11월 싱가포르와 각각 수교



- **北김영남, 테러행위, 절대 용납 불가(11/28, 연합뉴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8일 프라티바 파틸 인도 대통령에게 보낸 위로전문에서 인도 뭄바이에서 일어난 인질테러행위와 관련해 “무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행된 잔인한 테러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

- **폴란드, 北 평양외대에 교육설비 기증(11/27, 조선중앙통신)**
 - 폴란드 정부가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60돌에 즈음해 27일 평양외국어대학에 교육설비를 기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기증식에서 이바슈케비츠 대사는 “평양외대의 교육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양국간 친선 협조관계가 더욱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
 - * 앞서 이바슈케비츠 대사는 10월 16일 평양에서 궁석웅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북한 관리들을 초청한 가운데 양국 수교 60돌 기념 연회를 개최하였음.

- **北최태복, 카자흐스탄 상원의장과 회담(1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24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상원 의장과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 **北, 앙골라 대사에 조만석 임명(11/25, 평양방송)**
 - 북한이 조만석 민주공고 주재 대사를 앙골라 주재 대사로 겸임 발령한 것으로 25일 전해짐. 평양방송은 25일 조만석 대사가 11월 13일 호세 도스 산토스 앙골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내는 인사를 전했다고 보도
 - * 북한은 민주공고와 1972년, 앙골라와는 1975년에 각각 수교

3. 대남정세

- **北, 신문·잡지반입 금지, 적발시 방북불허(11/30, 연합뉴스)**
 - 북한이 12월 1일부터 남북간 출입 제한·차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는데 이어 남측의 신문, 잡지 반입도 금지한다고 30일 남측에 통보
 - 정부 소식통은 30일 “북측은 오늘 전화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에 남측 정기 출판물을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며 “반입 금지 물품을 들여올 경우 인원 및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고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밝힘. 특히 북측은 현재 제한적으로나마 신문, 잡지 반입이 허용되어온 개성



공단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도 이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됨.

- 북한 당국은 방북하는 남측 인사들에게는 신문을 휴대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9개 종류의 신문 20부를 반입토록 허용해왔음. 또 일반 방북자가 신문,잡지를 소지한 채 방북하다 적발될 경우 압수 및 주의 조치만 취한 뒤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았음.
- 북측은 이미 민간단체의 대북 뼈라살포 문제가 본격 제기된 10월 하순부터 개성공단관리위로 들어가는 신문,잡지에 대해 검열을 거쳐 문제시되는 내용은 삭제한 채 반입토록 해왔음.

● 남북 통행시간대 1일부터 대폭 축소(11/30, 연합)

- 북한이 예고한 '12·1 조치'에 따라 남북간 육로통행 시간대와 각 시간대별 출입 가능 인원 수가 다음달 1일부터 대폭 줄어들음.
- 우선 경의선 도로를 통한 출경(방북) 횟수가 오전 9,10,11시 등 하루 세차례(현재 12차례)로 줄어들고 매 시간대 출경가능 인원과 차량도 250명과 150대 이하(중전 500명, 200대 이하)로 감축, 또 입경(북귀) 횟수도 오후 3,4,5시 등 하루 3차례(현재 하루 7차례)로 줄어들고 입경 가능 인원 및 차량 수도 같은 폭으로 감소됨.
- 동해선 도로의 경우 현재 하루 2차례씩 각각 출,입경할 수 있지만 12월부터 매주 화요일 1차례씩만 오갈 수 있게 됨.
- 경제협력과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남측 인사의 육로 방북도 12월 1일부터 예외적인 허용사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단됨. 또한 북측은 이 통지문에서 "가족 사망, 구급환자 발생시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출입계획 변경이나 추가 통행은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힘.
- 개성관광과 경의선 열차 운행은 지난 28일을 마지막으로 이미 중단됐으며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역시 문을 닫음. 그러나 '12·1 조치'의 하나인 개성공단내 남측 상주 체류자 감축 건에 대해서는 북측이 아직 구체적인 감축인원을 통보하지 않고 있어 유동적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힘.
- 현재 개성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은 680여명이며 이들 중 철수 대상으로 최종 분류되면 12월 1일 이후 철수할 것으로 예상됨. 또 금강산 지역의 현재 체류자(192명) 중 철수 대상자들도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 중에 국내 복귀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발표
- *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12·1조치'는 개성공단 남측 인력과 관련, 관리위원회의 경우 50%, 생산업체는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 현대아산 협력업체는 30%, 건설,서비스 업체는 절반 정도만 각각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강산 지구 내 체류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줄이도록 하였음.



● **현대아산, 인력철수 박차…금강산 내주 완료(11/30, 연합뉴스)**

- 북측이 12월 1일부터 육로 통행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현대아산은 30일 자사 직원을 개성 지역에서 철수시키는 작업을 진행, 현대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30일 개성 상주 직원 91명 가운데 68명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수
- 개성에 잔류하는 현대아산 직원들은 개성공단 시설물 건설과 관리에 꼭 필요한 인력이며, 개성 관광을 담당했던 직원 4명은 1명만 남기고 남측으로 귀환
- 현재 현대아산 필수직원 25명을 포함해 200여명이 체류하는 금강산 지역 또한 북측이 내달 초까지 100명 미만으로 줄이라고 통보함에 따라 내주 중으로 북측과 합의해 단계적으로 인원을 철수할 계획

● **경의선 마지막 운행, 개성관광도 중단(11/28, 연합뉴스)**

-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차단 등을 담은 북한의 '12·1 조치' 시행을 사흘 앞둔 28일 경의선 철도가 마지막 운행을 하고 개성관광도 일단 중단
- 경의선 열차는 28일 화물을 싣지 않은 채 기관차 1량과 차량차 1량만으로 오전 9시30분께 도라산역을 출발, 북측 판문역으로 갔다가 오후 2시20분께 회차, 2007년 12월11일 56년여 만에 재개통된 경의선 열차는 북한이 12월 1일부터 운행을 중단키로 하면서 이번 운행을 마지막으로 다시 개통되는 날만 기다리게 됨.
- 개성관광객 210명도 28일 오전 버스 6대에 나눠타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출발, 개성에서 마지막 관광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 5시 10분께 돌아옴.
- 개성공단과 관련,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으로부터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체류할 수 있도록 통보받은 우리 측 개성공단 인원은 현재까지 1천600명 이상”이라고 언급했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은 37명이 잔류하게 됨. 통일부는 “북측은 체류증을 소지한 개성공단 관련 인원 4천168명을 감축 기준으로 삼았다”며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전체 인원 수요를 취합, 2천여명에 대해 잔류신청을 했는데 북한은 그 중 현재까지 1천600~1천700명을 허가했다”고 발표함.
- 북측은 또 12월말 종료 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개성 만월대 유적 발굴 현장의 남측 조사 인원에 대해 12월 1일 이후에도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입장을 남측에 공식 통보

● **北, 지원단체 실무자 방북 제한 다소 완화(11/2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12월부터 남북간 육로통행을 대폭 제한하면서 인도적 지원단체들에 대해서도 지원물자와 함께 후원인들이 대규모 방북하는 것을 불허하고 실무자 1명만 방문토록 엄격히 제한하려다 이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알려짐.



- 개성에 연탄을 지원하고 있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관계자는 “27일 개성에서 만난 북측 명승지개발지도총국 담당자로부터 연탄과 함께 실무자 방문은 허용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한번에 4~6명의 실무자가 방북할 수 있을 것”이라고 28일 전언, 명승지개발지도총국측은 11월 25일 실무협약에서는 12월부터 연탄나눔운동의 지원물자와 인솔자 1명만 개성지역에 방문할 것을 요청했었음.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中 “6자회담 일정 아직 협의중”(11/27)

-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27일 “중국은 현재까지도 다른 참가국들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차기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일정을 나머지 5개국에 제안했다”면서 “구체적인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5개국과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음.
- 이틀 전인 25일에도 친 대변인은 “중국은 12월 8일 6자회담을 개최하자고 다른 5개국에 제안했으며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었음. 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회담 일정을 발표해 오던 관례와 달리 23일 페루에서 열린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이 내달 8일 베이징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라이스 “6자회담 초점은 핵검증서 승인”(11/27)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내달 8일로 예정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의 초점은 북핵검증을 위한 북미간 합의를 승인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26일 밝혔음. 라이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참가하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베이징에서 열 예정”이라면서 “이번 6자회담의 초점은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 참가국을 대신해 서명한 검증의정서를 승인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우리는 (핵검증 문제를 다룬) 문서는 물론 (북미간 이뤄진)



몇가지 언질과 양해사항을 6자회담에서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핵검증 의정서 추인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며 다른 목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불능화가 재개됐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결론에 이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검증의 정서는 현 단계에서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이스 장관은 이란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란과 외교단절 상태를 끝내기 위한 이익대표부 개설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결정은 차기 행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미 국무부 “북핵 시료채취 명문화 노력”(11/25)

- 미국 국무부는 내달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자 회의를 앞두고 북핵검증을 위한 ‘시료채취’를 명문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현재 6자회담의 틀 안에 시료채취가 명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우드 부대변인은 6자 회담 이전 북미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 “현재 양자를 위한 어떤 계획도 없다”면서 다만 수석대표자 회담 이전에 한미일 3자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中 “다른 참가국들과 6자회담 일정 협의중”(11/25)

-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25일 “중국은 현재 다른 참가국들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12월 8일 6자회담을 개최하자고 다른 5개국에 제안했으며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에 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3일 페루에서 열린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이 내달 8일 베이징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 친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 노력으로 차기 6자회담을 개최하는 동시에 북핵 비핵화 2단계를 하루 빨리 전면적으로 이행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북핵 시료채취 입증문서 없다”<워싱턴타임스>(11/25)

- 북한 핵 검증의 핵심이슈인 시료채취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이에 동의했음을 보여주는 어떠한 문서, 음성 및 영상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워싱턴타임스가 24일 보도.
- 신문은 북한이 시료채취를 약속했다고 기술돼 있는 문서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대화록’이 유일하지만, 국무부 측은 내부문건임을



들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진위를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음.

-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평양에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회담하면서 시료채취에 동의한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북한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北매체 “경제보상이 6자회담 진전에 중요”(11/24)

- 북핵 6자회담이 다음달 8일로 예정된 가운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당국의 시료채취 거부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5자의 경제보상은 6자회담의 앞으로의 진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앙통신은 이날 ‘사태의 본질을 바로 보아야 한다’ 제목의 글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 언론들이 “6자 단장회담(수석대표회담) 개최가 늦어지고 5자의 경제보상 속도가 처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무슨 시료채취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듯”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들씌워 6자회담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극히 불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 특히 통신은 지난달 초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때 합의된 문건에 “시료채취와 관련한 그 어떤 문구도” 들어 있지 않은데 6자회담에서 시료채취 등을 포함시킨 검증문건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특수상황에 대해 견해의 일치를 보고” 채택한 평양합의에 대한 “전면거부로 된다”고 주장했다.
- 통신은 시료채취 문제의 제기에 대해 “서면합의 밖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곧 가택수색을 시도하는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난하며 “지금 일부 세력들과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 언론들이 시료채취 문제를 들고 나오는 데는 6자회담 자체를 지연시켜 저들의 경제보상 의무를 태공(태만)하고 의무이행이 처진 것을 합리화해 보려는 데 그 속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 힐 차관보 “北, 상대하면 할수록 어려워”(11/24)

-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최근 “북한은 상대하면 할수록 어려운 상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지난 17~23일 방미했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핵검증의 핵심인 시료채취(샘플링)에 대한 북한의 ‘말바꾸기’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 참석 의원이 24일 전했다.
- 힐 차관보는 한 의원이 “미국과 북한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이냐”고 묻는 질문에 “북한은 분명히 시료채취에 동의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이 ‘합의 내용을 본문에 넣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부속문서에 써넣었다”고 했고, ‘부속문서를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는



추가 질의엔 “본문만 공개하기로 북한과 사전 합의했다”며 “다음달 초 6자회담을 위해 베이징에서 만나면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음.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상태와 관련해 힐은 “지금은 심각한 (serious) 단계는 조금 지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 성 김 “북·미, 검증방안에 이견없어”(11/24)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특사는 24일 북한과 미국 간에 검증방안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밝혔음.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한 성 김 특사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우리측 차석대표인 황준국 북핵외교기획단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증과 관련) 합의한 사항에 대해 워싱턴과 평양 간에 혼돈(confusion)은 없다”고 말했음. 그는 “북·미 간에 (검증과 관련해) 이견은 없다”면서 “이제는 북·미 양자간의 합의와 이해사항을 6자 프로세스로 가져와 문서화하는 일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 북한은 최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한 샘플채취에 의한 검증을 거부한다고 발표해 북·미 간에 검증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성 김 특사는 이를 부인한 것. 외교 소식통은 이에 대해 “북·미 간에 공식문서에 의한 합의사항과 이해사항이 있다”면서 “당장은 어렵지만 비핵화가 보다 진전된 뒤 샘플채취를 실시하기로 북·미 간에 양해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 황준국 단장은 성 김 특사와 회동한 뒤 미측과 검증문제와 대북 에너지제공문제, 2단계(불능화 및 중유지원) 마무리 시간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한 뒤 “검증의 핵심사항들이 문서화돼야 하는데 한·미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음.
- 그는 “이번 6자회담에서 검증의 중요요소들이 포함된 검증의정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게 한·미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해 시료채취에 의한 검증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황 단장은 이어 “검증관련한 진전과 북한의 불능화 속도에 맞춰 5자의 경제·에너지 제공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에너지지원에 불참하고 있는 일본 몫을 국제모금 방식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 두 사람은 24일부터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7차 국제 군축·비확산회의에 25일 함께 참석, 중국 및 러시아의 관련 당국자들과 북핵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

● 中 “6자회담 일정 아직 확정 안돼”(11/24)

-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현재 6자회담 참가국들과 차기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에 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3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이 내달 8일 베이징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 중국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6자회담 일정을 미국이 발표한 것이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질문에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6자회담 조기 재개라는 대다수 참가국들의 희망을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했음.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지난 주말 중국 외교부의 질의를 받고 오는 12월 8일 개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은 빠르면 25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임.

● 북핵 6자회담 내달 8일 중국서 개최(11/24)

- 북한의 비핵화 관련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6자회담이 내달 8일 중국에서 개최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아태경제협력체) 리마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하는 항공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개최시기를 공개하고, “(이번 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장 해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음. 이에 앞서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은 APEC 정상회의 기간인 22일 별도의 3자 정상회담을 갖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핵검증 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내달초 6자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음. 조지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은 북핵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짓기 위해 북미간에 이미 합의된 검증체계에 관한 6자회담 당사국의 추인을 받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정권이양기에 들어선 만큼 버락 오바마 차기 정부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높이는 시간끌기 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여 현 단계에서 회담의 성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태. 북한은 이미 지난 12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현안인 북핵 검증과 관련, “검증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된다”면서 시료채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음.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과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부시 행정부와의 마지막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일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미·북 관계

● “美의회 ‘北.이란 장거리미사일 능력 과장’ 입장”(11/25)

- 미 국방부 산하 국방분석연구소(IDA)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해 추진한 미사일방어(MD)체제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
- 방송은 이 연구소가 최근 미 상하원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미사일방어체계에 관한 보고서’에서 2004년부터 설치된 미국의 초기 MD체제가 “북한의 위협” 때문에 구축됐으나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



국이 초기 MD체계를 서둘러 개발하고 배치하는 바람에 MD체계를 확고히 하고 확장하는 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등에 44기의 장거리 미사일 요격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나 “앞으로 국방부가 MD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사일방어국의 기능도 재편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 이에 대해 미 의회 관계자도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이 과장됐다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미 상·하원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심의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요격에 초점을 맞춘 현 미사일방어체계를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체계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오바마측, 北에 미이익대표부 조기 설치 고려” <닉시> (11/25)

- 미국의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매우 조기에” 북한 평양에 미국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가 24일 밝혔음.
- 그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차기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북한과 협상에서 기존의 6자회담을 넘어서 고위급이 관여하는 양자대화도 폭을 넓힐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기 위한 일정한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오바마측 소식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익대표부 조기설치 가능성을 들었음.
- 닉시 박사는 북한이 미국의 이익대표부 설치에 동의할 경우 미국이 평양주재 영국 대사관이나 스웨덴 대사관내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이익대표부 설치를 허용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북한이 제네바합의(1994년) 뒤 미국과 연락사무소를 교환하기로 했다가 미국 정보원들의 침투를 우려해 포기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은 북한이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데 적극적인 만큼 연락사무소든 이익대표부든 대미 외교관계의 설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도 “부시 행정부가 요즘 이란에 이익대표부의 설치문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평양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 방송은 “현재 북한의 핵불능화가 시작되고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되면서 평양에 상주하는 미국 정부직원도 늘고 있다”면서 ‘정통한 미국 외교소식통’을 인용, “현재 북한에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은퇴한 미국 관리가 한 사람은 식량분배 감시 업무를, 다른 한 사람은 핵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北해역서 中어선 불법조업 성행”(11/28)

- 중국 어선들이 서해상의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 불법적인 조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중국 언론이 28일 보도.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신경보(新京報)는 지난 5월11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동강(東港)시를 떠나 서해상에서 조업하다 침몰한 랴오둥원(遼東運) 396호 사건을 보도하면서 중국 어선이 북한 해역으로 건너가 불법조업을 하는 현상은 상당히 오래되고 흔한 현상이라고 보도.
- 보도에 따르면 동강시 인근 해역은 어족자원이 빈약하지만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북한 해역은 자원이 풍부해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어민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것. 중국 어선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려면 허가증이 필요한데 이를 개인들끼리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브로커를 통해 중국 해관과 해양경찰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신문은 이 같은 불법 행위는 대형회사들까지 등장해 성업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동강시 어정처(漁政處)의 한 관리도 “이런 현상은 동강에서는 이미 오래된 일”이라고 인정했다고 보도.
- 랴오둥원 396호 역시 북한 해역에서 조업한 뒤 고기를 신고 돌아오다 5월 11일 동강 해상에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처음에는 19명의 선원이 모두 구조됐다고 발표했으나 가족들의 신고와 재조사 요구로 추가조사를 한 결과 40명 중 구조된 19명 외에 10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된 것으로 드러났음.

● “北, 내년부터 중국산 중고차 밀매 금지”<RFA>(11/28)

- 북한이 내년부터 북한의 자동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중고자동차 밀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전했다. RFA는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북한에선 지난해 1월 일본이 일본산 자동차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 이후 틈새를 노린 중국산 자동차의 밀무역이 성행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평화자동차와 계약을 맺은 화천자동차 이외에는 중국 자동차를 수입할 수 없게 돼 있음. RFA는 이 소식통을 인용해 또 “북한은 내년부터 자동차 수입 관세도 대폭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동안 중국 상인들이 북한의 낮은 관세를 이용해 판매했던 미국 GM의 뷰익과 독일의 폴크스바겐 등 일부 자동차의 판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 당국이 관세를 올리더라도 기증이나 물물교환 형태의 편법 매매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올해 북·중 교역규모 크게 늘어 <中상무부>(11/27)**

- 올해 북한과 중국 간 교역 규모가 10월에 이미 작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27일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북·중 교역액은 총 21억2천400만달러로 지난해 총 교역액 19억7천600만달러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음. 이런 추세라면 올해 북·중 교역규모는 25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6억7천100만달러, 수입은 14억5천3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각각 38.8%와 2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양국 교역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교역 비중이 큰 광석과 광물성 연료(원유와 석탄)의 교역이 대폭 증가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됨.
-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북한산 광석수입은 1억8천74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2% 증가했으며,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광물성연료도 4억6천700만달러로 5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음.
- 북·중 교역규모는 2005년 16억달러, 2006년 17억달러, 2007년 19억7천600만달러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북·중 교역규모가 남북한 교역 규모를 2억달러 가량 초과했음.

● **“中, 한중 군사핫라인 개통 북한에 사전통보”(11/26)**

- 중국이 한국과 군사핫라인 정식 개통에 앞서 이를 사전에 북한에 통보했다고 중국 인민일보사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6일 보도. 중국측 군당국 소식통은 이번 군사핫라인 개통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이 있다는 외국 매체의 보도를 부인하면서 “중한 군사핫라인 개통은 이미 오랜 시간을 두고 협상이 진행돼왔으며 군사핫라인 개통에 합의한 직후 조선(북한)측에도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 이 소식통은 “조선측은 (중한) 군사핫라인 개통의 의미와 용도를 이해했으며 조선 외에도 미국과 러시아측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 중국측 군당국 소식통의 이같은 언급은 군사핫라인 개통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 재난구조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됨.
- 신문은 “훈련을 목적으로 (양국의) 군함 또는 전투기가 출동시 이를 군사핫라인을 통해 (상대측에) 통보함으로써 오판 가능성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음.
- 한중 양국은 지난 24일 베이징(北京)에서 양측 군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중 해·공군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평택 제2함대사령부-중국 칭다오(靑島) 북해함대사령부, 대구 제2중앙방공통제소-지난(濟南)군구 공군지휘소간 군사핫라인을 정식 개통했음.



● 中, 北 남북교류 차단 주요뉴스로 타전(11/24)

- 중국 언론은 24일 개성관광 및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한 남측 인사의 방북과 남북 철도운행을 전면 중단한다는 북한 발표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음.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이 남북관계와 관련한 5개항의 조치를 한국에 통보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보도. 통신은 북한이 한국에 통보한 5개항의 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역의 남측 인사 선별 추방과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개성 관광 전면 중단, 남측 열차운행 불허 등이라고 전했다.

라. 일·북 관계

● “日 초당파 의원모임 연내 방북 취소”<RFA>(11/29)

-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핵 및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일본 초당파 의원들의 모임인 ‘일조 국교 정상화 추진 의원연맹’이 연내에 방북할 계획을 취소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전했다.
- RFA는 이 연맹의 야마자키 타쿠(山崎拓) 회장이 올해 방북단을 파견하려고 북한과 시기를 저울질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북을 내년으로 연기해 달라는 북한측 요청을 받아들여 연내에 방북할 계획을 취소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심각한 점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강경한 점을 들며 “지금은 북한을 방문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 일본 자민당의 전 부총재인 야마자키 의원이 최고고문으로 있는 ‘한반도문제 소위원회’와 민주당의 이와쿠니 데쓰도(岩國哲人) 전 부총재가 회장으로 있는 ‘한반도문제 연구회’는 대북 강경정책을 주장하는 ‘납치의원연맹’에 맞서 지난 5월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조 국교 정상화 추진 의원연맹을 결성했음.
- 그러나 북일 실무협약에서 합의한 납치 재조사가 백지화되고 북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일본에서는 의원들이 방북할 시기가 아니라는 지적이 높아졌으며,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도 납치 재조사 합의가 진전되지 않는 한 내년에도 방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RFA는 소개했음.

● “김정일 지난달 또 발작”<마이니치>(11/26)

-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10월 하순에도 뇌졸중으로 발작을 일으켜 긴급 수술을 검토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됐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
- 마이니치신문의 보도 내용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하순에 두 번째로



뇌졸중을 일으켰다는 정보를 한국에 있는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고 보도한 일본 민방 TBS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확인해 줄만한 객관적인 팩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음.

-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뇌졸중으로 처음 쓰러진 이후 후유증이 남아 있지만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져 왔음.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재차 발작이 일어남에 따라 각국 정보기관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음.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8월 중순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면서 긴급 입원했음. 정밀검사 결과 심장내 혈전이 떨어져나가 뇌혈관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음. 이에 중국과 프랑스 양국 뇌신경외과 전문의가 평양에 갔으며 며칠 뒤 프랑스 전문의가 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음.
- 김 위원장은 왼쪽 반신에 마비가 남고 언어도 불명료한 상황이었지만 수술 후 약 두달간의 경과는 비교적 순조로웠음. 그러나 지난달 하순 재차 발작이 왔으며 증세가 심각해서 의료팀이 두 차례에 걸쳐 긴급 수술을 검토했음. 그러나 재수술이 실시됐는지는 아직 불명확함. 베이징(北京) 외교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현재는 소강상태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마이니치는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로 인해 그의 매제인 장성택(張成澤)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이 주요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 기타

● 北서 숨진 재미목사 유산 北가족에 전달된다(11/30)

- 1990년 9월 방북했다가 아내를 상봉하고 갑자기 사망한 미주 한인 교계의 LA영락교회 고(故) 김계용 목사가 남긴 유산이 북한 가족에게 전달됨. 미주 한인 교계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고 김 목사의 유산은 현금만 10만4천달러임.
- 김 목사의 유산 처리를 담당해온 로스앤젤레스 소재 미 법률사무소의 배리 실버 조사국장은 “지난 18년간 북한 내 가족을 찾으려고 수소문 해온 결과 올해 가을 마침내 부인 이진숙(89) 씨와 아들 김광훈(61) 씨가 평북 정주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최근 평양 고려법률 사무소로부터 가족증명을 확인하는 제반 서류를 전달받아 오랫동안 미해결로 남아있던 김 목사 유산 정리 문제를 마무리 짓게 됐다”고 밝혔다.
- 배리 실버 조사국장과 전화통화는 30일 송광호 강원도민일보 북미 특파원이 했고, 그가 이 같은 사실을 연합뉴스에 알려왔음. 배리 씨는 “일정기간 내 유산상속 가족을 찾지 못하면 유산은 자동으로 미국 정부재산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북한은 폐쇄국가라 접촉할 수 없는 주민을 찾는 특수사정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계속 시간을 연기해 줬다”고 전했다.



- 현재 미 법률사무소 측은 유산의 45%를 수수료로 뺄 것(유가족 지급액은 55%)을 원하고 있으나 북측은 유가족에게 75%를 지급(미 수수료는 25%)해 줄 것을 요구해 양측의 이견 조율만 남아있음.
- **“탈북 일가족 4명 동남아 한국대사관에 인도돼” <VOA> (11/27)**
 - 베이징올림픽 직전인 지난 7월 중국 베이징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HCR)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해 다녔던 탈북자 9명중 일가족 4명이 제3국으로 탈출해 한국행을 앞두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
 - 이 방송은 허모씨 가족 4명이 미국의 탈북 운동가인 필립 벅 목사와 수전 솔터 북한자유연합 회장의 도움을 받아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로 탈출해 지난 22일 그 나라 주재 한국대사관에 인도됐다고 전했다. 방송은 그러나 지난 7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탈북자 4명은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조선족들이 많은 돈을 요구하며 사실상 감금하고 있어 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미국내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 **체코체류 탈북자 4명 전원 美 입국(11/26)**
 - 체코 프라하에서 현지 정부의 보호를 받아온 탈북자 4명 전원이 24일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전했다.
 - 이들은 도와온 재미교포 윤요한 목사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하고 “탈북자 네명 가운데 여성 탈북자 한명은 시애틀에, 남성 탈북자 한명은 피닉스에 정착할 예정이고 부부 탈북자는 아직 정착 도시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이들의 미국 입국에 따라,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현재 72명으로 늘었음.
- **ICRC, 북한서 장애인용 이동진료차량 운영<RFA> (11/26)**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의족 등 교정기구 정기점검을 받기 힘든 북한의 지방 장애인들을 위해 이동 진료차량을 운영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
 - ICRC의 마틴 운터네흐러 동아시아지역 홍보대표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장애인들이 매번 평양까지 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치료소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국제요원과 현지 고용인들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장애인 치료 전문가들이 북한내 지방 도시들을 자유롭게 방문해 장애인들에 대한 후속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지방을 방문할 때마다 북한 당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거부된 사례가 없었고 북한 당국도 장애인들에 대한 치료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처음으로 북한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치료소를 운영한 이후 지난해 100명,



올해 300명 등 지방에 사는 장애인들 4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소개했음.

- ICRC는 2002년부터 황북 송림시의 영예군인(상이군인)교정기구공장과 평양 락랑구역의 장애인 재활치료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의 장애인 치료 전문가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北 대표 “UN안보리, 제재.무력 사용 배격해야”(11/25)

-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방향과 관련,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강압적인 조치들을 철저히 배격할 것을 주장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했다.
- 북한 대표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안보이사회가 많은 경우 일부 특정 국가들의 이해관계 실현에 이용되고 있고 권능 밖의 문제들이 취급되는 등 이사회의 월권행위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강압적인 조치들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하며, 안보이사회 결의들이 총회의 승인 하에서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를 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안보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있는 기관으로 되어야 하고 그 어떤 특정국가의 전략적 이해관계 실현을 합법화해주는 도구로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안보이사회가 발전도상 나라들만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마당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유엔 성원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블록 불가담(비동맹)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의 대표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안보이사회 확대문제와 관련해 상임이사국보다 실현 가능한 비상임이사국부터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 그는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더라도 “지난 날의 전범국으로서 아직도 과거 침략사를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하고 있는 일본과 같은 나라가 상임이사국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北, 소말리아 해적 퇴치 논의 참가(11/25)

- 북한이 26일부터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해상안전위원회에 참석, 국제사회의 소말리아 해적 퇴치대책 논의에 참여.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는 25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와 인터뷰에서 “국제해사기구의 해상안전위원회 회의는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회의이고 북한도 회원국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특히 이번에 소말리아 해상의 해적에 관한 사안도 저희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의 영국 주재 대사관은 IMO 대표부 역할도 함께 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 1986년 IMO에 가입했음. IMO의 리 아담슨 선임 공보관도 “회의 때마다 출석했던 북한이 이번 회의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달 5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더 기승을 부리는 소말리아 해상의 해적들을 소탕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
- 북한은 북한 선박 대홍단호가 작년 10월 소말리아의 모가디슈항에서 선원 43명과 함께 해적들에게 납치됐다가 미국의 도움으로 해적들을 제압하고 탈출한 사건 이후 IMO 연례총회 등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을 소탕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대한 협력 의사를 밝혔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스티븐스 “北, 통미봉남한다면 큰 오산”(11/26)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26일 이날 오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정세현)가 롯데호텔에서 ‘한미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연 초청강연에서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두달정도 남았는데 북한이 미국과 한국 사이를 이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미국은 한국을 소외시키는 어떤 해결책에도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 스티븐스 대사는 강연 후 청중과 문답에서도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대한 질문에 “과거엔 그런 전략이 들었지만 앞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연에서 스티븐스 대사는 또 “미국의 공화당 정부이든 민주당 정부이든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미래도 있다”고 역설했음. 스티븐스 대사는 이어 “최근 북한의 군사분계선 봉쇄와 대남 협력중단 조치는 안타깝다”며 “이 조치가 결코 북한에 도움이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가 인내를 갖고 대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음. 그는 “남북대화는 북핵 6자회담의 성공에 중요하고 9.19공동성명의 이행에도 중요하다”며 “미국은 최선을 다해 남북대화의 재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 청중과 문답에서도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강경조치에) 조용히, 침착히 대응을 잘 해왔다”고 거듭 평가하고 “그러면서도 대화의 여지는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도 앞으로 노력할 것이며,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북한과의 접근 유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는 6자회담에 대해 “2005년 9.19공동성명에 나와있는 대로 단순한 비핵화를 넘어 완전한 비핵화 와, 그 이상으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가 목표이며, 이는 인접국인 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또 통일을 위한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도 의미한다”고 말하고 이는 “미국 새 행정부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말했음. 그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적극적인 (북핵) 검증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 합의가 마무리되고 이를 통해 최종 핵폐기 단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스티븐스 대사는 “한미동맹은 지역문제를 넘어 더 큰 문제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주한미군은 한국 국민이 원하는 때까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나. 중·러 관계

● 中-러 정상, 금융위기에 전략적 공동대처 합의(11/24)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3일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정상 회의에 참가 중인 후진타오 주석은 이날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고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행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다짐했음.
- 후 주석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G-20 회의기간 가진 양자 회담에서 국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양국이 오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정치, 경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한 전략적 행동계획을 승인했음. 후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중·러 양국은 냉전시대 이후 최악의 정치·경제 구조가 심각을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에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후 주석은 또 양국은 ‘중·러 선린우호협력 조약’을 바탕으로 선린관계와 전략적 안보 협력의 이행에도 역점을 뒀야 한다고 말했다. 후 주석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음.

다. 기타

● “10명중 5명만 ‘통일 필요’..회의감 증대”(11/27)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소장 박명규)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통일 의식’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조사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약화되고 통일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천2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필요’(25.9%)와 ‘약간 필요’(25.7%)를 합해 51.6%를



- 차지했음. 이는 지난해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률(63.8%)에 비해 12.2% 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통일 의식의 약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연구소는 분석했음.
- 통일 필요성이 ‘반반’이라는 응답이 23.4%를 차지했고, ‘별로 불필요’(19.6%), ‘전혀 불필요’(5.4%)라는 응답이 뒤따랐음. 연구소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관한 질문엔 ‘3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이 24.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3.8% 포인트 늘어난 것임.
 - 아예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지난해의 9%에서 이번에 22.3%로 급증한 반면 ‘5년 이내’(2.3%)나 ‘10년 이내’(13%) 등 가까운 미래에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는 적었음.
 - 통일의 추진 속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빠른 통일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가장 많았음. ‘현재 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16.3%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4.5% 포인트 늘었으며,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지난해의 2배 가까운 8.6%로 조사됐음.
 - 대북정책 인식과 관련,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57.3%로 나타나 지난해 72.5%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51.8%로 전년(57.4%)에 비해 소폭 줄었음.
 - 통일 과정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은 북한 인권이라는 답변이 7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72.2%)였음.
 -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협력 대상이라는 인식이 57.6%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지원대상(21.9%)이 많았으며, 경제대상(11.3%)이나 적대대상(5.3%)이라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어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주변국 관계 문항에서, 북한을 포함한 주변 5개국 중 가장 친근감을 느끼는 나라로는 미국(59.9%)이 꼽혔고 그 다음이 북한(20.3%), 일본(9.6%), 중국(7.7%), 러시아(1.6%) 순이었음.
 -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는 일본이 지난해에 비해 8.3% 포인트 증가한 34.1%로 1위로 꼽혔다. 지난해 첫째로 꼽혔던 북한은 올해 33.6%로 2위였으며, 미국은 지난해 21.1%에서 올해 16.2%로 감소했음.
 - 연구소는 조사 결과 국민의 보수적 경향이 심화됐고, 현실주의 경향이 증대했으며,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에서 북한의 역할과 책임의 비중 인식이 커졌고, 남북관계와 국제협력이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음.
 - 연구소는 “의식의 보수화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것을 북한과의 전면적인 대결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에 대한 성찰과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음.

● **李대통령, G20.APEC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11/25)**

-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밤 11박 12일 간의 미국과 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특별기 편으로 귀국했음. 이 대통령은 14~16일 방미 기간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측 대표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인사인 짐 리치 전 하원 아태소위원장과 회동했다. 미국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 연구소 연구원들과 외교·안보 간담회도 가졌음.
- 이 대통령은 금융정상회의에 신흥국 대표로 참석해 참가국 주요 정상들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회귀 반대, 새로운 규제 ‘동결선언’(Stand-Still) 동참 등을 촉구했고, 오바마 당선인측과의 간담회에선 포괄적인 한미동맹을 비롯해 북핵문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주요 현안을 처음으로 조율했음.
- 이 대통령은 이어 17~20일 브라질을 공식 방문해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역 및 투자 증진, 자원·인프라·농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이어 20~21일 페루를 국빈 방문해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페루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내년 중 개시 등에 합의했음.
- 이 대통령은 이어 22~23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거듭 촉구했음.
-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조지 부시 대통령과 별도 ‘고별회동’을 가졌음.
- 한미일 3국 정상은 회동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6자회담을 내달 초 개최기로 합의하는 등 북핵문제와 금융위기 등에 대한 3국 공조를 다짐했음.
- 이 대통령은 귀로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들러 동포간담회를 갖고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접견했음.

● **한총리, 중동 3개국 순방차 27일 출국(11/24)**

- 한승수 국무총리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개발자원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중동지역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출국함.
- 총리실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총리가 27일부터 다음 달 3일 까지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등 3개국을 순방한다고 밝혔음. 한 총리는 28~29일 열리는 개발자원 고위급 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금융체제 개혁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개발재원 확대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의지를 표명할 예정.

- 이번 고위급 회의에는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150여개국 고위급 정부인사와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개발재원 확대방안을 논의. 한 총리는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타니 카타르 국왕이 G20 국가 및 신흥경제국 대표를 초청해 개최하는 ‘국제금융위기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뒤 카타르 국왕과 총리를 만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건설.플랜트 사업 진출 방안 등을 논의.
- 한 총리는 이어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쿠웨이트와 터키를 방문해 에너지분야 협력, 교역.투자 확대방안, 원자력발전 및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우리 기업의 건설.플랜트.교통분야 진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

● 한-칠레 정상회담..다자 FTA 결성 모색(11/24)

-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FTA(자유무역협정) 결성이 추진됨. 제16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23일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모색기로 의견을 모았음.
- 바첼레트 대통령은 내년 3월 칠레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지역간 FTA 추진을 위한 협상을 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미국, 호주, 인도, 페루 등도 참여할 것이라고 소개한 뒤 한국의 협상 참여를 요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긍정 답변했음. 이 대통령은 또 발전 프로젝트와 초고속인터넷망 개설 분야 등에서 한국 기업의 칠레 진출을 지원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으며, 바첼레트 대통령은 즉각 이를 위한 협의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음.
- 양 정상은 이 밖에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국제금융위기 공조,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등에도 의견을 같이했음.



[참고 1] <경색지수 높아가는 남북관계 일지> (연합뉴스, 11/30)

- 분사분계선을 통한 남북 통행이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측의 불만에 따른 조치로 12월 1일부터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선에서 극히 제한됨에 따라 남북관계에 살얼음이 끼었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존중.이행 문제를 중심으로 갈등하면서 대남 대응수위를 높여온 북한의 행태로 미뤄 앞으로 남북관계의 완전한 결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음.

- ▲ 1. 1 = 북한 신년 공동사설 “10.4선언 철저 관철” 강조
- ▲ 2.25 = 이명박 대통령 취임
- ▲ 3. 6 =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남한의 대북 인권개선 촉구에 “망동” 비난
- ▲ 3.24 = 북,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핵-개성공단 연계 발언에 개성공단서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
- ▲ 3.28 = 북,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3차례 발사. 북 해군 사령부 대변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서 남북 충돌 경고
- ▲ 4. 1 = 북 노동신문 논평원,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 거론해 “역도”라고 비난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본격 비난 개시
- ▲ 4. 3 =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전화통지문, ‘긴장조성 행위 중단’을 촉구한 남측의 전통문 수용을 거부하고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 경고
북 해군사령부 보도,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입했다며 “예상 외의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 주장
- ▲ 5. 8 =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 글,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 전쟁을 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 5.30 = 북,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 ▲ 6.22 =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담화, 남측 정부가 ‘3통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 ▲ 7. 8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이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고 촉구
- ▲ 7.11 = 금강산 관광객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 남한 정부, 남한 조사단의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
- ▲ 7.12 = 북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금강산 사건 “유감”이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며 현장 조사 거부
- ▲ 8. 3 = 금강산 지역 북한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 “금강산 관광지구 에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인원 모두 추방” 발표
- ▲ 8. 9 = 동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실무 북측 책임자 통지문, “금강산 관광지구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 추방 조치 8월10일



부터 실시” 발표

- ▲ 9. 3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해 “모략극” 주장
- ▲ 9.23 = 정부 소식통 “북한, 최근 서해상과 중국 접경지역서 대규모 비행훈련 실시”
- ▲10. 2 =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개성공단 사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살포중단 요구
- ▲10. 7 = 북, 서해 상공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 ▲10. 9 = 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 조성” 주장
- ▲10.16= 북 노동신문 논평원 글,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정책” 지속 시 “북남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주장
- ▲10.28= 남북 군사회담 북측 대표 “빠라살포 등에 군 실천행동” 경고
- ▲11. 6=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등 군부 조사단 6명, 개성공단 현황 점검
- ▲11.12=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 전화통지문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 북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성명,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 북한측 대표 철수, 판문점을 경유한 남북 직통전화 단절
- ▲11.22=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는 발언에 대해 남한 정부와 “북남관계, 통일문제를 논할 여지 없다”고 주장
- ▲11.24=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12월 1일자로 개성관광 전면 차단 및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의 남한 당국관련 상주인원 및 차량 선별 추방 입장 통보
- ▲11.25= 북 노동신문, 남한 정부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도발 책동” 비난
- ▲11.27= 북, 12월 1일부터 경의선 및 동해선 출입경 시간대 대폭 축소 등 통보
- ▲11.28= 개성관광 및 경의선 철도운행 마지막 실시 후 잠정 중단
- ▲12. 1 = 북측 군사분계선 육상통행 엄격 제한·차단조치 실시(예정)

hanarmdri@yna.co.kr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11/30/0511000000AKR20081130037900014.HTML>